

9부 능선 넘은 광주·전남광역연합...상생 아이콘 되나

전남도의회, 의결안 수정 가결...광주시의회 19일 임시회 예정
교통·산업·SOC 공동 추진 기대...위치·의장 선출 등 쟁점 남아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하 광역연합)' 설립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026년 초 출범을 앞둔 광역연합은 정부의 '5급 3특' 초광역권 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역 상생 발전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규약안 부칙에는 사무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물리적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 및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11일 해당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던 광주시의회는 전남도의회의 수정 의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광주시는 규약안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시의회 측과 조율 중이다.
시는 17일 중으로 광주시장 명의로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출범 날짜가 1월 1일로 못

박혀 있던 기존 안을 유연하게 변경해 충실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17일 방청 결재 후 시장 요구를 통해 19일 금요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수정된 규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시도 의회에서 규약안이 최종 처리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규약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승인 및 고시는 별다른 걸림 사유가 없는 한 이달 내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약이 고시되면 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2단계 사무개시 준비' 절차가 본격화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광역연합 사무소 소재지 선정이다. 현재 전남도는 사무소 위치 결정을 도지사에게 위임받은 상태다. 양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연합의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조직 체계·인력 운용, 연합의회 조례 및 규칙 세부 내용 등 43건에 달하는 안건과 구체적인 연합 사무(공동 사무)의 범위를 확정 짓는 과제도 남아있다. 시도는 실무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내년 2월 임시회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설치와 연합의회 구성도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특별회계 조례를 의결하고, 연합의회를 구성할 의원 12명(광주 6명, 전남 6명)을 추천해 의결하게 된다.
이후 2월 중 열릴 예정인 연합의회 임시회에서는 연합의장과 의회 의장을 선출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2026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광역연합 설립은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급 3특' 체제에 대응하는 핵심 거점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5급 3특'은 수도권에 대응해 5대 초광역권(메가

시티)을 육성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종합계획이다.
광주·전남 광역연합은 이 체제 안에서 에너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전략 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나 관광 벨트 조성 등 단일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 단위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규약안 재의결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완성하는 과정"이라며 "내년 초 준비과정을 내실 있게 거쳐 광역연합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상생의 아이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여성과 함께~ 16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제28회 전라남도 여성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양성평등의 시대, 전남 여성과 함께!'란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5·18 조사위, 500억 예산 쓰고도 발포명령 등 쟁점 못밝혀

광주시의회·RISE사업단 토론회, 계엄군 기록물 철저히 분석해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계엄군 진술에만 의존하고 '기록물'에 대한 교차 검증에 소홀해 핵심 과제 규명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조사위가 수집한 방대한 자료가 국립가기록원으로 이관됐음에도 대다수가 검색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기록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은 16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조사위 이후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활동 종료 2년을 맞은 조사위의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진상규명의 핵심 열쇠인 '기록물'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5·18기념재단이 지난 10월 발간한 활동 분석

보고서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기념재단 보고서가 조사위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위원들의 정치적 입장으로 치환해버림으로써, 조사 역량 상실과 외부 권력의 개입 등 구조적인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사위 실패의 본질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국방부와 정치권, 지역사회 내부의 타협 등 '숨겨진 권력'이 조사 설계와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제2기 진상규명의 성공 조건으로 철저한 '계엄군 기록물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조사위가 4년 동안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발포 명령 등 핵심 쟁점을 밝히지 못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계엄군 진술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1980년 작성된 군의 '검시 결과 보고서'와 '병력배치 요도' 등을 교차 분석해 5월 19일에 이미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를 들며, 기록이 말하는 진실을 역추적하는 연구 중심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진우 5·18기념재단 진실기록부장은 기록물 관리의 난맥상을 짚었다.
박 부장은 "조사위는 활동 기간 중 역대 규모인 284만건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검색되는 조사위 관련 자료는 고작 1461건에 불과해 핵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기록이 단순히 과거를 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햇불이 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가 연구자와 시민들에게 온전히 공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신정훈 "이대통령, 전남을 에너지 전환 중심 만들어"

인공태양 시설 유치 행사 참석

전남도가 나주시와 함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민들과 비전을 공유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나주시와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나주, 인공태양을 품다!'를 주제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과 강위영 전남도 경제부지사,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대학·산업계·연구계 인사와 유치위원회 위원, 도민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정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태양이라는 미래 에너지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올려놨다"

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로 산·학·연·관이 촘촘히 연결된 에너지 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모든 과정에 함께해 준 나주시민과, 전남도민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전남에서부터 끝까지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강위영 부지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환영사를 대독하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위대한 쾌거로, 500만 호남인,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로 핵융합 전용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는 한편, 300개 연관 기업 유치, 1만 명의 고용창출, 약 10조 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가 만든 교육 혁신...이제 전국 모델로

광주시·시교육청 성과보고회...인재 선순환 도시 기반 구축 앞장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구현한 지역 교육의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통합지원체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35개 협약 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시는 지난해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인재가 광주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공교육 혁신과 지역 특화 취업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시는 지난 3월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 지역으로 꼽힌 데 이어, 10월 진행된 운영 성과 관리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며 국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단연 주목을 받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이 정책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